의안 번호	75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

(하경석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

(하경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의 원 : 하경석・감규상・곽은정・권순재・김우진
남호준・류성국・배명갑・박강우・박연정
서명일・이무식・이우완・전홍표・조은우
지상록・장병운・진형익 의원(18명)

1. 제안 이유

❍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방위・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용지 부족 해소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광산 및 토양오염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성 검토 등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특히 조성원가와 분양가 차액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창원시에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가 전략사업의 재정적 위험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전가할 우려가 있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합리적인 비용・위험 분담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폐광산 영향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광산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암석・암반 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토양·암반 조사 및 사업성 검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와 국가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 간 차액 약 3,820억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정화비용 등을 창원시에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 및 조성원가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비와 사업 위험을 공동사업시행자의 지분과 책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3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원을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는 2024년 10월 16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 지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 15%로 정하고, 각 기관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보상, 공사 및 행정절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폐광산 영향과 토양오염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성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

창원시는 폐광산 갱구부와 영향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사업면적을 약 72만 평으로 축소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 토양오염조사까지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폐광산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음에도 암석과 암반의 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와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토양오염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

인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검사 대상과 기준을 달리하며 추가 검토를 반복한다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과 검토 종료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부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창원시가 파악한 협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높은 조성원가와 북면지역의 적정 분양가 간 차액을 창원시가 공공지원금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8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폐광산지역 등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정화비용까지 창원시가 부담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미리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성원가와 분양가격, 오염 여부와 정화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시가 비용을 전액 또는 상한 없이 부담하도록 협약에 명시하는 것은 불확정한 사업 위험을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창원시의 사업 지분율은 1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분양가 차액과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창원시가 전액 부담한다면 이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지분과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위험 분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지원금이 향후 회수

되지 않는 구조라면 이는 사실상 소모성 재정지원이 된다. 여기에 오염정화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창원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사업의 손실과 환경 위험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반복적인 검토와 지방정부에 대한 부담 요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저리 정책자금 및 조성원가 절감대책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토양·암반 조사와 사업성 검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및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와 국가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성원가와 분양가 차액을 창원시에 전액 또는 상한 없이 부담시키는 요구를 중단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의 지분과 책임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라.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